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최근 3년간)

	개정 이유	주요내용
<p>법률 제13965호 2016.2.3. 일부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문화재수리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수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p>가. "감리"의 용어를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로 구분하여 정의함(제2조제9호).</p> <p>나. 문화재실측설계의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장이 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로 규정함(제5조제5항 단서).</p> <p>다.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제9조제5호 신설).</p> <p>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되는 기능분야의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봄.(제11조제1항).</p> <p>마.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청장에게 경력·학력·근무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등을 신고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제13조의2 신설).</p> <p>바.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미리 문화재청장에게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p> <p>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p> <p>아. 발주자는 문화재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p> <p>자. 문화재수리 정보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6항).</p> <p>차.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 확대 및 산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함(제41조의2 신설).</p> <p>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정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자격취소 등의 사유</p>

	개정 이유	주요내용
		<p>에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를 추가함(제47조 제1항제4호의2 및 제8호의2, 제11호 신설).</p> <p>다.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격정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추가함(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호의2 신설).</p>
법률 제14437호 2016.12.20. 일부개정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업자 결격사유 개정(제9조, 제15조)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2호 및 제15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제2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법률 제15066호 2017.11.28 일부개정	-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등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가. 10년 이상 종사 공무원의 기술자 자격시험 일부면제 규정 삭제(제8조)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 제3항 단서 삭제 및 제5항 중 "과목 및 방법,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항"을 "과목 및 방법"으로 개정
법률 제16058호 2018.12.24 일부개정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처리지연 등 소극행태를 개선하고 그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가. 문화재수리업 변경신고, 양도·합병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제14조, 제17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 - 문화재수리업의 변경신고(안 제14조), 문화재수리업의 양도·합병신고(안 제17조) 나. 조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의 인용 조항 개정 등(안 제21조, 제51조, 제62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최근 3년간)

	개정 이유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일정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65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과 책임감리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p>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제11조의2 신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받는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함.</p> <p>나. 책임감리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제20조제2항 신설) 문화재감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감리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수리로서 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등에 대한 문화재수리로서 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함.</p> <p>다.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제22조제2항)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하고,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각 종류별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각각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하도록 함.</p>
대통령령 제28178호 2017.7.11.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기준 점수를 조정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전문교육을 받은 이후에 다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완화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p>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의 대체(제9조제2항 단서 및 별표 4의2 신설, 제10조제1항)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한국사능력시험의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함.</p> <p>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제11조제3항 및 제4항)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1명당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30점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1명당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1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p> <p>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제28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종전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전문교육을 받은 날 이후에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실제 수</p>

		<p>행한 기간이 5년이 지날 때마다 그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만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5년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기간의 제한 없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편의를 도모함.</p>
<p>대통령령 제28885호 2018.5.15. 일부개정</p>	<p>-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66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과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에 대한 일반감리의 경우, 비상주(非常駐)문화재감리원이 배치되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산정할 때에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이고, 그 문화재수리가 동일한 시·군에서 행하여지면 이를 1개의 문화재수리 현장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과목 삭제(제7조, 제9조) 나. 문화재수리·감리 보고서의 제출 방법 등 구체화(제19조의3, 제22조의2)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전자문서화하기 위하여 파일의 규격, 저장매체 및 제출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감리대상 고시권자 범위 확대(제20조) 문화재수리 가운데 일반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고시권자에 시·도지사를 추가함 라. 문화재감리원의 배치기준 조정(제21조, 제22조) 동일 시·군 내에서의 소액 문화재수리인 경우 비상주문화재감리원 배치 기준 완화</p>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최근 3년간)

	개정 이유	주요내용
문화체육 관광부령 제284호 2017.2.3.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을 인정하기 위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65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신고 절차와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p>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신고(안 제5조의4 신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력 등 신고서에 발주자 등의 확인을 받은 경력 등 확인서, 해당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p> <p>나.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안 제10조의2 신설)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 문화재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p> <p>다.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안 제10조의3 신설)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하고,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수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도록 하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을 피상속인의 문화재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하되,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함.</p>
문화체육 관광부령 제306호 2017.8.25.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에게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의 수수료 반환 기준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의 수수료 반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누어 각각 납부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p>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공고 방법 변경(제7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함</p> <p>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필기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변경(제9조, 제10조, 별표4)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공통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 일부 전공과목은 실무를 검정할 수 있는 과목으로 변경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을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함</p> <p>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조정(제11조) 실기와 면접의 비중을 종전 50 : 50에서 70 : 30으로 조정</p> <p>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기한 변경(제28조) 5년이 지날 때마다 5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를 5년 6개월이 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변경</p>

	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 관광부령 제333호 2018.7.17. 일부개정	<p>-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 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을,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 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문화재감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의 서식을 별도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일부 면제대상 삭제(제3조)</p> <p>나.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제6조) 문화재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개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p> <p>다. 문화재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서식 마련(제19조) 별지 제23호의2서식</p> <p>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별표 1의3)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3, 6개월</p> <p>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별표 2)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3, 6개월 하도급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 3, 6개월</p>